

아황산 저감책 탈황“표류”

환경처 황새걸음에 상공부·정유기업은 뱀새걸음「배짱」

환경처가 주관하고 있는 「대도시지역 아황산 가스 저감을 위한 연료사용 규제고시 개정시행」과 관련, 저황유 사용·공급에 따른 국내 정유사의 현실은 이를 수행할만한 단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아황산가스 저감을 위한 가장 실질적인 정책인 탈황시설 정책이 겹돌고 있는 상황속에서 환경처의 「저황유 공급 사용지역 확대 방안」은 관련부서인 상공자원부의 입장과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효율적인 정책 결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처의 「대도시지역 아황산 가스 저감을 위한 연료사용 규제고시 개정」내용을 보면, 서울 및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일부지역에 국한됐던 청정연료 및 저황유 사용 공급지역을 대폭 확대, 황함유량 1.6%벵커C유의 경우에는 현행 부산 등 18개 시·군에서 청주, 전주, 군산을 추가했다.

정유 5개 기업의 중질유 탈황 및 분해시설 현황 (단위 : B/D, 억원)									
기업명	공 정 명			기술도입선	시설규모	사업허가	완공예정일	투자비	비 고
유공	제 1	분해 탈황	Hydeocrackr	Unocal (미)	30,000	87.3	92.12 완공	4,800	국내최초 중질유탈황
			VRDS	Chevron (미)	30,000				
	제 2	분해 탈황	FCC	UOP (미)	40,000	92.12	96.12	8,000	
			RHDS	Chevron (미)	60,000				
호유	제 1	분해 탈황	FCC	Stone & Webster	70,000	89.3	95.1	1,040	
			RHDS	“(미)	50,000		97.10		
쌍용	제 1	분해 탈황	Hydrocracker		30,000	89.12	95.6	9,500	
			VEDS		25,000				
	제 2	분해 탈황	FCC	IFP (프)	30,000		96.10		
			HDS	“(미)	30,000		96.12		
경인	제 1	분해 탈황	FCC	UOP (미)	30,000	92.12	97.12	9,000	
			RHDS	Chevron (미)	30,000		90년말준공		
현대	제 1	분해	Hydrocracker	UOP (미)	34,000				중질유탈황 공정 없음

또 황함유량 1.0% 벵커C유의 경우는 현행 서울 등 수도권 20개 시·군에서 오는 7월1일 부산시, 95년1월 울산시내 영남화력, 7월1일 대구시, 96년 7월1일 광주, 대전시 등 41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저유황 공급의무화 지역을 34개 시·군에서 38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한편, 경유 및 벵커C유의 유황 함유량도 각각 0.4%, 1.6%에서 0.2%, 1.0%로 낮춰 시행토록 한 이후 1년 사이에 또 다시 대폭 개정된 내용으로 추진과정에서 현실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실제 정유사의 현실은 고유황 벵커C유를 저유황으로 낮춰가는 중질류 분해 및 탈황시설의 경우, 각 기업들이 97년까지 약 4조원의 투자비를 들여 추진하고는 있지만 부대공정설비 과정에서의 정부지원 미약, 법인세 면세 혜택 기간의 단기성, 기자재 도입시 지원·시설자금지원 부족 등 투자비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는 등 계획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저유황 공급방안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운송대책의 경우는 현재 선박시설만 제대로 갖춰져 있는 상황속에서 국내 운송확대시 레일탱크, 탱크트럭 등의 시설·장비확보가 사실상 어렵고 그나마 정부의 사전고시조차 이뤄지지않아 유종확대에 따른 출하설비의 보강에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정부는 국내공급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수입한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결국, 수

입량 확대에 의한 국내 정유사의 기술 및 제품 경쟁력이 뒤쳐질 수 밖에 없으며, 더우기 환경차원에서 시급히 추진 되어야 할 탈황시설조차 뒷전으로 물러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는 등 시기와 방법에서 현실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대부분의 정유사들은 4.0% 벙커C유를 크래킹하는 과정에서 경제성과 투자비를 고려, 탈황시설 계획을 일부 선회하는 등 분해시설은 그대로 추진하되 저유황유를 수입하는 쪽으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학저널 1994/5/9>